



주간통일정세 2009-47(2009.11.16~11.2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4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인민보안성 본부 시찰(11/2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보안성(우리의 경찰청) 본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기술연구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근무상황을 살펴본 후 “인민보안성의 모든 지휘성원(간부급)과 인민보안원들이 계급투쟁의 제1선부대, 당의 내무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맡겨진 전투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북한방송들은 보도
 -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위원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주상성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보안상, 리병삼 인민보안성 정치국장 등이 그를 맞이함.

- **김정일, 군부대 산하 목장 현지지도(11/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580부대 산하 ‘7월18일소목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북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것은 11월 8일 제1224부대 시찰 이후 12일 만임.
 - 김 위원장은 목장 축사와 풀절임장 등을 둘러보고 “고기생산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는 목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을 공업화, 과학화하는 것이며 여기에 선차적인(우선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
 - 통신은 이 목장이 2만여㎡의 광활한 부지에 건설됐고 “다량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축산기지”라고 소개
 - 현지지도에는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의 여인’ 김옥, 노동당 간부와 결혼?(11/19, 중앙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네 번째 여자로서 알려져 왔던 김옥(45)이 최근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첩보를 우리 정보 당국이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19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정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기술 서기(비



서)로 일해 오던 김옥이 최근 노동당 간부와 결혼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며 “현재 그가 서기실(비서실) 업무에서 손을 떼고 물러난 것으로 안다”고 전언, 북한은 중앙당에서 일하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직장을 옮기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임.

- 평양 음악무용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옥은 1980년대 후반부터 김 위원장을 곁에서 보좌해온 것으로 파악돼 왔음. 이에 따라 김옥은 성혜림(사망)·김영숙·고영희(사망)에 이은 김정일의 네 번째 여자로 인식돼 왔음. 그는 사실상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고영희가 2004년 사망한 이후에는 부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추정돼 왔음.
- 그러나 올 4월의 최고인민회의 직후 김옥의 활동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우리 당국은 파악, 정부 당국자는 “그의 활동이 줄어드는 대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부장의 활동이 대폭 늘어난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며 “김옥의 결혼 첩보와 김경희의 재등장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언
- 그동안 공개 활동이 거의 없었던 김경희는 6월 초 김 위원장과 함께 협동농장을 방문해 15년 만에 공개 촬영을 한 것을 시작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으며 이후 그는 김 위원장을 열두 차례 수행

나. 정치 관련

● 노동신문, 현인택 장관 실명 거론 비난(1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대결소동’ 제목의 글에서 남한의 보수세력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직접 겨냥해 비난
- 신문은 “최근 북남관계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악화된 북남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며 “남조선의 반통일 보수세력들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현인택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조선 통일부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대화과 협력을 악랄하게 반대해 나서고, 그 무슨 3대조건이니 뭐니 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계속 차단봉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

● 北외무성, 유엔 대북인권결의 전면 배격(1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
-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이 해마다 벌이고 있는 판에 박힌 정치적 모략책동”이라며 “인권



옹호의 미명하에 내정간섭을 일삼으면서 우리 인민 자신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감히 어찌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조작해낸 ‘결의’를 우리는 언제나와 같이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밝힘.

● 역도산 패밀리 북한서 ‘중용’(11/20, 마이니치신문)

- 일본에서 프로 레슬링의 대부로 인정받는 역도산(본명 김신락)의 사위와 사위의 여동생들이 북한의 유력 포스트에 진출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0일 보도
- 이들은 모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과 가까운 인물로, 장 부장이 복권하면서 재차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언, 신문은 이어 북한이 지난 9월 역도산의 제자인 안토니오 이노키(66)에게 평양 사무소 개설을 허가한 것도 이런 점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 신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용된 인물은 역도산의 사위 박명철(68)과 그의 여동생 2명임. 박명철은 올 초를 전후해 국방위원회 참사에 발탁됐으며, 박씨의 여동생인 박명선(67세로 추정)은 지난 9월 부총리에 등용됨. 또 그 아래 여동생(이름 불상)은 장씨의 부인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동생인 김경희가 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경공업부 부부장을 맡고 있음.
- 박명철과 명선은 장성택 부장과 가까운 사이로, 그가 2004년 실각한 뒤 공직을 박탈당했던 것으로 알려짐. 박명철은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 선수단을 이끌었던 거물로,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체육부 장관격인 조선체육지도위원장을 맡았었음. 박명선은 1990년대부터 내각대외봉사국장을 맡아 왔으나 이들 모두 자리를 빼앗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역도산의 사돈이자 이들 3형제의 부친인 박정호는 고(故) 김일성 주석과 가까운 사이로 대남 공작 부분에 많은 공을 세웠던 인물로 알려짐.

● 노동신문, 범민련은 통일애국운동 조직 선전(1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민족 대단결 위업을 힘있게 추동해온 범민련’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19주년을 맞아 “범민련은 결성 후 지난 19년 동안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길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주장
- 신문은 범민련이 “해내외의 각계 통일운동 단체들과 광범한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 세워 자주통일 위업 실현으로 고무 추동하는 범민족적인 통일애국운동 조직”이라고 설명



- **평양방송, 대화·협상 전도는 남측에 달려(11/16,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6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시종일관한 입장’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의 전도는 남측에 달려 있다”고 주장
 - 방송은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면 북과 남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떠나서는 북남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없고 관계를 개선할 수도 없다”고 주장
 - 평양방송은 1970년대 적십자회담 및 고위급 회담과 ‘7.4공동성명’을 거론하면서 “이 역사적 사변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과 노력이 낳은 열매”라고 강조, 방송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북남 공동선언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다”며 “북남 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옳은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伊IT업체, 北과 프로그램 공동개발(11/21, 자유아시아방송)**
 - 이탈리아의 정보기술(IT)업체들이 북한과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이탈리아의 정보기술 업체인 ‘엘레롬’사의 리오네티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지’(Sinji)사와 공동으로 개발해 출시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곳곳에 유통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설명, 그는 “북한이 원격 강의, 온라인 교육의 확대를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높은 수준의 관련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 회사와 꾸준히 접촉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
 - 북한은 이미 지난 10월 ‘엘레롬’과 함께 컴퓨터에서 강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접속, 교수의 강의를 직접 시청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음.
 - RFA는 “이탈리아의 또 다른 정보기술업체인 ‘쿠오타제로’도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KCC)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북한 기술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북한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소개
- **김책제철, 생산공정 현대화 한창(11/20, 조선신보)**
 - 북한 최대 제철소인 함경북도 청진시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생산공정의 개진(개선) 현대화와 선철 증산으로 들끓고 있다”고 조선



신보가 20일 소개, 우선 이 기업소는 “100일 전투 기간 국내(북) 연료를 이용한 선철 생산에 성공했다”고 신문은 전언

- 신문에 따르면 기업소는 종전에 수입 코크스(탄소 고체연료)를 연료로 선철을 생산해왔음.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크스 매장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수년간의 연구 끝에 무연탄과 갈탄을 연료로 선철을 생산하는데 최근 성공한 것임.
- 정영춘(47) 1부기사는 “시험운전에서 나타났던 일부 기술적 부족점을 퇴치해 11월 말경부터 연산 수만 t급 용광로를 돌려 생산을 정상화하게 된다”고 소개, 그는 “연산 수십만 t의 대규모 용광로를 2012년까지 설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언

● 北, 핵 자금조달 위해 무기밀매(11/19, 연합뉴스)

- 북한이 핵 프로그램 유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무기밀매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유엔안보장이사회 전문가그룹의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에서 나옴. 또 북한이 자국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과 무기밀매, 금수 품목인 사치품의 수입 등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 19일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될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 및 군사장비의 확보와 거래, 판매를 위해 매우 조직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보고서는 유엔이 금지한 무기밀매가 “북한의 외화 획득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
-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무역, 거래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들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거래들을 가리려하고 있다”고 지적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6명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위해 송장을 허위 기재하거나 화물을 허위 표시하고 여러 명의 중개인을 거치도록 하며 발송인과 수취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그룹은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할 북한 기업과 인물 및 금수품목 선정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보고서는 2010년 5월께 제출하겠다고 밝힘.

● 오라스콤회장, 北 이동통신가입자 증가추세(11/18, 연합뉴스)

-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이집트의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투자 전망이 밝다고 밝힘.
- 사위리스 회장은 17일(현지시각) 카이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를 8만여명으로 추산하며 가입자가 계속 늘는 것이 “기적”이라고 설명, 오라스콤은 북한의 지난 9월 말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가 7만명여명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가끔 기적을 바란다”며 “25년 전에 언젠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된다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북한이 언젠가 통일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 사위리스 회장은 지난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50대 부자 리스트에 오른 이집트의 거부로, 오라스콤 텔레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선진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벌이고 있음.

● **美봉사단체, 北에 집짓기 지원(11/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봉사단체인 풀러센터가 평양 순안 구역 오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 집짓기 공사를 시작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이 센터의 데이비드 스넬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 11일 첫 번째 공사 지역인 순안 구역 오산리에서 북한 정부 대표와 함께 농촌 살림집 50가구 착공식을 가졌다”며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집을 지을 자원봉사자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힘.
-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해 온 풀러센터는 착공에 앞서 1년 반 동안 북측과 협상을 벌였으며, 오산리는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로 가옥 3만 채가 무너진 곳으로 알려짐.
- 스넬 대표는 “오산리 주택의 기본 설계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이 맡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설된다”며 “앞으로 북한의 200여 지역으로 집짓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또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최소한의 연료로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태양열이나 풍력발전기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것으로 전해짐.

● **北선원, 28명 승선한 선박 해적에 피랍(11/17, 연합)**

- 북한 선원 28명이 승선한 버진 아일랜드 선적의 화학물질 운반선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됐다고 소말리아에 파견된 유럽연합(EU) 함대가 17일 밝힘. EU 함대에 따르면 버진 아일랜드 선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테레사 8호’가 16일 소말리아 근해 인도양 상의 세이셸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해상에서 해적에 납치되었음.
- 이 선박에는 약 2만2천300t의 화학물질이 선적돼 있으며 북한인 선원 28명이 승선한 상태라고 EU 함대는 설명



라. 군사 관련

● 美 핵과학자회보, 북한 등 9개국 핵무기 보유(11/20, 자유아시아방송)

- 현재 전세계에서 북한을 포함한 9개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회보’ 11·12월호가 밝힌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 RFA 보도에 따르면 핵과학자회보 11·12월호는 ‘2009 세계 핵무기 배치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말 현재 핵보유국은 북한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9개국이며 전체 핵무기 규모는 2만3천360기에 이른다”고 설명
- 이들 9개국 가운데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다섯 나라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공식 핵보유국이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음.
- 이 보고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핵보유 규모와 저장 장소는 밝히지 않음. 보고서는 그러나 미 공군의 최신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
- 지난 4월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음.
- 핵과학자회보 보고서는 또 이들 9개 핵보유국 외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해 놓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 14개국, 111곳에 핵무기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실전 배치 중이거나 실제 운용 중”이라고 주장

● 北, DMZ에 비축용 병커 800개 구축(11/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2007년 비무장지대(DMZ)에 작전 물자를 저장하는 병커 800여개를 구축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북한군에서 상좌(대령급) 계급으로 있다가 2000년대 탈북해 한국군 정보기관에서 활동했던 김주성(가명)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 김씨는 “2007년까지 남침용 병커와 위장용 병커가 최소 800개 건설됐다”면서, “병커에는 1500명에서 2000명의 병력이 완전무장할 수 있는 작전 물자가 비축됐다”고 주장, 북측이 DMZ에 남침용 병커를 짓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이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던 노무현 정부 집권 2년째인 2004년 이라고 RFA는 보도
- 김씨는 또 “유사시 북한의 게릴라 부대원들이 32kg의 전투 배낭을 메고 완전 무장해 DMZ까지 올 경우 체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돼, 병커를 짓고 남침용 작전 물자를 보관한 것”이라며, “발사관탄, 60mm 박격포탄, 압축폭약, 각종 탄알 외에도 한국군의 군복과 명찰을 준비



해 한국군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또한 그는 “병커 중 70%는 남측을 교란하기 위한 가짜”라면서, “병커는 반(半)지하 상태지만 남침용 땅굴과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소개

● **北 미사일-해안포 레이더 어제 오후 한때 가동징후 포착(11/15, 연합)**

- 군 당국은 15일 북한 황해도 웅진반도 일대에 배치된 실크웬 등 지대함(地對艦)미사일 및 해안포 부대에서 한때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한 징후를 포착하고 함정을 대피시키는 등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군 소식통은 “오후 1시쯤 장산곶과 그 이남 해안 일대에 배치된 북한 지대함 미사일 및 해안포 부대의 사격통제 레이더가 가동되는 징후가 포착됐다”며 “대청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미사일 및 해안포의 사정권에 있던 해군 초계함(1200t급)과 고속정들을 사정권 밖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힘.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IMO 총회 참가(1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 참가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보도, 통신은 “영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26차 회의에 참가할 고능두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해사감독국 대표단이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북한은 1986년 IMO에 가입했으며 본부가 있는 영국 주재 대사관이 대표부 역할을 맡고 있음.

● **김정일, 여성 치마저고리 자랑할 만해(2009년 10월호, 조선여성)**

- 조선여성 10월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성들의 옷차림과 대해 발언한 내용을 게재, 이 잡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선 여성의 치마저고리 착용을 권장
- 김 위원장은 “사람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은 그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며 “여성들이 치마저고리를 입으면 단정해 보인다. 우리 여성들이 입는 치마저고리는 세상에 자랑할 만하다”고 강조, 김 위원장은 또 “민족옷을 입는 문제를 가지고 근로단체 조직 등에서 교양사업을 잘하고 가정들에서도 부모들이 자식들을 교양하여 사람들이 옷을 입어도 조선옷을 입고 자랑하며 멋있게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 잡지는 소개
- 또 김위원장은 “여성들은 조선옷과 양복, 달린옷(원피스)과 나넌옷(투피스), 바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옷을 계절과 몸매에 맞게 다양하게 입어야 한다”며 “여성들이 뜨개옷(편직물)과 코트, 화려한 색깔의 달린옷을 입으면 거리가 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잡지는 소개



● 노동신문, 머리는 단정하고 소박하게(1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 15일 ‘머리단장을 우리 식으로’라는 기사에서 헤어스타일과 관련, 남성은 장발을 삼가고 여성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지 말 것을 주문
- 신문은 “사람들이 머리단장을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시대적 미감에 맞게 단정하면서도 소박하게 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거나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것은 혁명하는 시대 사람들의 정서적 풍모와 시대적 미감, 민족적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
- 신문은 이어 “짧은 머리는 남자들의 머리단장에서 기본”이라며 “남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면 고상하고 단정하고 패기와 정열이 넘쳐 보이며 혁명하고 투쟁하는 시대에 사는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짧은 머리’를 적극 권장, 여성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머리 형태”인 단발머리나 땡은 머리를, 신혼 초의 주부나 중년여성에게는 파마나 묶음 머리를, 노인에게는 쪽진 머리를 권고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채택(11/20, 연합)

-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 이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음.
-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이번 결의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 난민과 관련해 난민 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 갔음.
- 이날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는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임.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5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됨.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categorically reject)”며 “일본과 EU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 박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는 인권탄압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화된 것이며,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나. 북·미 관계

● 美 대북인권특사 인준안 상원 통과(11/22, 연합)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20일 밤(현지 시간) 미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음. 이에 따라 킹 특사는 국무부 선서식을 거쳐 조만간 공식 업무에 착수하게 됨. 킹 특사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여할 예정임.
- 특히 킹 특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전임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와는 달리 상근직 대사급으로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게 돼 향후 활동 방향이 주목됨.
-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北김책공대 총장 방미 연기(11/21, 미국의소리방송)

- 11월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던 홍서헌 총장 등 김책공업종합대학 대표단의 방문일정이 연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1일 보도, 김책공대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추진해온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번스 리비어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로부터 (대표단의) 연기 통보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연기를 통보했고 새해에 최대한 빨리 방문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고 설명
- 리비어 회장은 “아직 미 국무부도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美, 北, 6자회담 복귀 암시 있었다(11/21, 연합)

-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20일 “우리가 (북·미간) 만남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6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는 북한의 암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런 암시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



고 밝힘.

- 이 당국자의 언급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 결과를 토대로 6자회담 혹은 다른 형태의 다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입장과는 달리 이미 미국에 궁극적인 6자회담 복귀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뜻임.
- 그러나 이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많은 것을 말하고도 실제로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6자회담 복귀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매우 변덕스럽다’는 것”이라고 언급, 한편 내달 8일로 예정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가 동행할 것이라고 국무부 당국자는 밝힘.
- 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에 들어가게 될지 등에 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언론의 동행취재 여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클린턴, 北과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검토(11/21,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메시지와 관련,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지난 19일 아프간 주재 미 대사관에서 가진 미 언론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에 큰 혜택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갈 것”이라고 답변,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이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온 몇 가지 문제들, 즉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경제지원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다”고 설명,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다짐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이를 6자회담 틀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 보즈워스, 12월 8일 방북, 북미대화 착수(11/19, 연합)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하고,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 북미대화에 나서기로 했음.

● 美 골드버그 교체되도 대북제재 불변(11/1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해 온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이 예정대로 교체되도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



- RFA보도에 따르면 이 국무부의 관리는 “골드버그 조정관이 국무부의 정보조사 차관보에 지명됐지만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대북 제재 조정관의 역할을 계속한다”며 “그의 후임자도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 **오바마, 대북 식량지원은 안할 것(11/18, 워싱턴포스트)**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
- 신문은 19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중인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비록 북한의 식량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언, 이 당국자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인센티브) 패키지에 들어있지 않으며, (북한의 핵포기는) 6자회담의 의무사항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혀 그간 이뤄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 **조선신보, 북미 양자관계 우선 논의해야(11/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7일 ‘조미 양자회담, 시원은 8월의 평양상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국무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북미간) 관계 개선 방도에 관한 문제가 선차적(우선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어떤 형태로든 당사자들 사이에 견해의 일치, 양자 합의가 이뤄져야 국면전환의 돌파구가 열린다”며 “조미 사이에 해결 방안을 찾아야 다자 대화를 해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말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기간 양자 관계에 대한 합의점이 나와야 6자회담 복귀가 가능할 것임을 강조

다. 북·중 관계

● **北통신, 中國방부장 “곧 방북” 보도(11/20, 조선중앙통신)**

- 량광렬(梁光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곧 북한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통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상장 량광렬이 곧 조선(북)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방북 일정과 목적 등은 밝히지 않음.
- 중국 국방부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06년 4월 차오강촨(曹剛川) 당시 국방부장 이후 3년7개월 만임.



● **북한군 ‘정치일꾼 대표단’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면담(11/1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는 18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정각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정치일꾼 대표단’을 만났다고 보도, 시 부주석은 대표단의 이번 방중이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 등은 소개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상원 의장, 23일 북한 방문(11/21, 러시아의소리방송)**

- 러시아 연방의회의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 의장이 23일부터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21일 보도
- 미로노프 의장은 방북에 앞서 “북한 지도부가 나를 초청한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를 만족스럽게 생각해 접수(수용)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밝힘. 그는 “(북러) 양국 사이의 접촉을 강화하고 쌍방관계의 포괄적인 문제와 세계안전문제에 대한 회담진행이 필요하다”며 “북러관계 발전에서 의회간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언급

● **인민보안성 대표단, 러시아 방문(11/17, 평양방송)**

- 허영호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제1차 ‘세계도로안전에 관한 상(장관)급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러시아, 대북 식량지원 완료(11/17, 조선중앙통신)**

-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완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통신은 “이번에 러시아 연방 정부가 조선(북)에 식량을 기증한 것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표시로 된다”고 보도, 그러나 러시아가 지원한 식량의 종류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음.

마. 북·일 관계

● **민주조선, 일본, 과거청산해야 국제영향력 발휘(11/1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8일 ‘선후차도 모르는 일본의 도덕적 저열성’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범죄 청산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일본 정부가 2차대전 당시 해외에 억류됐던 일본군 병사 출



신 자국민들에게 ‘특별급부금’을 지급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남이 야 고통 속에 몸부림치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는 일본의 냉랭한 태도야말로 저주받을 처사”라고 주장, “일본은 자기 병사들에 대한 보상에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끼친 과거범죄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세계가 미래를 내다보며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나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흐름을 일본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日 재침략책동에 자위적군사력 강화(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조선 재침을 노린 무모한 불장난’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자위대의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재침략 책동에 대처해 자위적 군사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본에서 대규모의 상륙작전연습인 제2차 자위대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졌다”며 “이번 연습이 일본 반동들의 재침 시나리오에 따라 감행됐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며 “일본 반동들이 이번에 전혀 없는 대규모의 무력을 동원하여 상륙작전 연습을 벌이면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그들의 재침 책동보다 엄중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

바. 기타국가 외교 관계

● 영국 여왕, 북핵 문제 언급(11/19, 연합)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8일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해 나가겠다고 언급,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의회 연설(Queen's Speech. 칙어)을 통해 “정부는 이란과 북한의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 것을 포함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
- 영국 여왕은 매년 11월 의회 회기가 시작될 때 개원 연설을 통해 입법계획을 밝히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음. 정부의 입법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왕이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여왕은 연설 뒷부분 국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대목에서 북한과 이란을 예로 들었음.

3. 대남정세

● 北, 현대통해 금강산관광재개회담 제의(11/20, 연합)

- 북한이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20일 파악됨.



대북 소식통은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관광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18일 금강산에 갔을 때 북측 리종혁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며 이를 남한 당국에 전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설명

- 리 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공식적인 회담 제의로 받아 들여도 좋다면 회담에서 금강산·개성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6.15 기념행사’에 보조금지원 추진(11/20, 연합)

- 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 공동선언 채택 10주년(2010년 6월 15일) 기념행사에 통일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정부 당국자는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2010년도 통일부 예산안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내년에 추진할 6.15 10주년 기념행사에 정부 보조금 조로 3억원을 지원하는 안이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
- 그는 “통일부 예산안 원안에는 6.15 10주년 행사 관련 지원액이 반영돼 있지 않았는데,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다”며 “정부가 6.15선언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전언
- 이에 따라 당초 3억1천500만원으로 책정됐던 내년도 민화협 지원 예산은 6억1천5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다만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010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됨.
-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3억원이 통일부 예산에 최종 반영되면 오직 6.15 10주년 행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외 다른 남북간 합의를 기념하는 각종 사업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 사업 계획은 정부와 민화협이 협의해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

● 남북 단체, ‘을사늑약 104주년’ 공동호소문 작성(11/17, 조선중앙통신)

- 남한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한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17일 일제의 ‘을사5조약’(을사늑약) 체결 104주년을 맞아 공동호소문을 발표, “일본의 과거 범죄를 철저히 청산하여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떨쳐나가자”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호소문에서 “2010년은 일제에 의해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2010년을 ‘전민족적 반일 공동투쟁의 해’로 정하고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대중적 운동을 과감히 벌여나가자”고 강조, 양측은 또 “민족의 대단결로 6.15통일시대를 힘차게 떠밀어 나가자”며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



을 추구하는 반통일 행위를 짓부셔버리고 서로의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자”고 강조

● **정부, 금강산관광재개 3대조건 불변(11/17, 연합)**

- 정부는 오는 18일로 11주년을 맞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와 관련,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기존에 내건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힘.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어서 현지 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관광 재개와 관련, 정부가 거듭 밝힌 기존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
- 이 부대변인은 이어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관광객 피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경감키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 등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로서는 그외 다른 추가 조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부연

● **남북교역 회복, 반입 1억달러 첫 돌파(11/17, 연합)**

- 10월 남북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하고 북한 물품의 반입 규모는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 간의 교역 규모는 1억7천2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1억6천301만 달러)보다 5.9% 늘어났다.
- 반출 건수는 3천543건, 금액은 7천194만 달러이고 반입 건수는 3천616건, 금액은 1억66만 달러임. 반출액은 9월보다 3.4% 줄었지만 올해 두 번째 규모였고, 반입액이 1억 달러가 넘는 것은 사상 처음임. 이 때문에 지난달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10월보다 커서 전년 동월 대비 교역액은 9월에 이어 2개월째 증가했음.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핵과학자회보 “북한 등 9개국 핵무기 보유”(11/20)

- 현재 전세계에서 북한을 포함한 9개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회보’ 최근호(11.12월호)가 밝힌 것으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함. RFA 보도에 따르면 핵과학자회보 최근호는 ‘2009 세계 핵무기 배치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말 현재 핵보유국은 북한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9개국이며 전체 핵무기 규모는 2만3천360기에 이른다”고 말함.
- 이들 9개국 가운데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다섯 나라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공식 핵보유국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음.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외무성 성명이나 자국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해 왔음. 하지만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지난 4월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함. 핵과학자회보 보고서는 또 이들 9개 핵보유국 외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해 놓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 14개국, 111곳에 핵무기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실전 배치 중이거나 실제 운용 중”이라고 주장함.
- 이 보고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핵보유 규모와 저장 장소는 밝히지 않았음. 보고서는 그러나 미 공군의 최신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함.
- 러시아는 보유중인 약 1만3천 기의 핵무기 가운데 4천850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9천400기 중 2천700기를 실제 운용 중이라고 보고서는 전함.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 및 배치 규모를 줄인데 반해 중국(240기 보유), 파키스탄(70~90기), 인도(60~80기)는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면서 배치 지역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함.
- 핵과학자회보는 1945년부터 미 시카고대학에서 발간해 온 핵과학 전문지로, 특히 핵과 다른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해 야기된 위협과 관



련해 세계 안보와 공공정책 문제를 다루고 있음. 이 잡지는 국제적인 핵에너지 통제를 옹호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핵 정책 관련 이슈를 알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北, 핵 자금조달 위해 무기밀매”<유엔보고서>(11/19)

- 북한이 핵 프로그램 유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무기밀매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그룹의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에서 나왔음. 또 북한이 자국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과 무기밀매, 금수품목인 사치품의 수입 등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온 것으로 나타남. 19일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될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 및 군사장비의 확보와 거래, 판매를 위해 매우 조직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보고서는 유엔이 금지한 무기밀매가 “북한의 외화 획득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함.
-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함. 이에 대해 뉴욕 소재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애널리스트 에이브러햄 김은 “제재의 목적은 리스크를 높여 북한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보고서가 그러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함.
-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무역, 거래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들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이러한 거래들을 가리려하고 있다”고 지적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6명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위해 송장을 허위 기재하거나 화물을 허위 표시하고 여러 명의 중개인을 거치도록 하며 발송인과 수취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유명회사를 이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들은 북한이 해외 은행들의 대리계좌나 현금 배달 등 돈세탁 및 다른 은밀한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관련, 지난 8월 아랍에미리트에서 북한의 수출용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호주 선적 컨테이너 선박이 화물을 압류당했던 사례를 언급함.
- 또 북한이 유엔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의 수입을 계속해왔으며 지난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탈리아로부터 요트 2대를 구입하려다 금지당했던 사례도 언급함. 전문가그룹은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할 북한 기업과 인물 및 금수품목 선정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보고서는 내년 5월께 제출하겠다고 밝힘.



나. 미·북 관계

● 美 한반도 전문가 3명 방북(11/22)

-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 니콜 피네만 KEI 학술연구부장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명이 21일 방북했음. 프리처드 소장 일행은 21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서 특별한 언급 없이 북한 고려항공편을 타고 평양으로 향했다고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이 22일 말했음.
- 이들은 24일까지로 예정된 방북 기간 북·미 관계 및 핵과 관련된 북한 주요 당국자들을 연쇄적으로 면담할 것으로 예상됨.
- 프리처드 소장 일행의 방북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차원이지만 내달 8일 북·미 양자대화를 앞두고 이뤄지는 미국의 최고 북핵 전문가들의 평양 방문이어서 북·미 대화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들은 3박 4일간의 방북 활동을 마치고 베이징을 거쳐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미국 국무부에 방북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음.

● 美 대북인권특사 인준안 상원 통과(11/22)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20일 밤(현지 시간) 미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음. 이에 따라 킹 특사는 국무부 선서식을 거쳐 조만간 공식 업무에 착수하게 됨. 킹 특사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여할 예정임.
-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北김책공대 총장 방미 연기”<VOA>(11/21)

- 이달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던 홍서현 총장 등 김책공업종합대학 대표단의 방문일정이 연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1일 전했다. 김책공대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추진해온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번스 리비어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로부터 (대표단의) 연기 통보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연기를 통보했고 새해에 최대한 빨리 방문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음.
- 리비어 회장은 “아직 미 국무부도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총장을 비롯한 김책공대 대표단은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해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3~4일간 학술 교류를 하고 뉴욕을 3~4일간 방문할 예정이었음.
- 시라큐스대는 지난 2001년부터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김책공대와 교류하고 있으며 두 대학의 과학자들은 서로 수차례 상호방



문하면서 공동 연구사업을 하고 있음.

● **美한반도전문가 3명 오늘 방북(11/21)**

-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 니콜 피네만 KEI 학술연구부장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명이 21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짐. 프리처드 소장 일행의 방북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차원이지만 다음달 8일 북·미 양자대화를 앞두고 이뤄지는 미국내 최고 북핵전문가들의 평양 방문이어서 북·미대화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외교 소식통은 “프리처드 소장 일행이 미국 정부와의 협의 하에 오늘 방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미관계 및 핵과 관련한 북한 주요 당국자들을 연쇄적으로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프리처드 소장 일행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평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24일까지 3박4일간 북한에 체류할 예정임.

● **클린턴 “北과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검토”(11/2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메시지와 관련,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지난 19일 아프간 주재 미대사관에서 가진 미 언론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에 큰 혜택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이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온 몇 가지 문제들, 즉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경제지원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다”고 말함.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다짐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이를 6자회담 틀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내달 8일 1박2일 일정으로 4~5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할 예정임.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보즈워스 대표를 12월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방북 시점을 발표함.

● **오바마, 보즈워스에 특별지침 하달(11/2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달 8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에게 북·미대화와 관련한 특별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20일 알려짐. 오바마 대통령은 이 지침에서



- 이번 북·미대화의 목적이 양자간 협상이 아니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핵 현안에 정통한 북수의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이번 북·미회담이 6자회담을 리플레이스(replace.대체) 하는게 아니며 6자회담에 북한이 돌아오고 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침을 보즈워스 대표에게 줬다고 말했다”고 전함. 이는 이번 북·미대화를 실질적 양자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미 국무부는 보즈워스 대표단의 평양체류 일정을 1박2일로 단축하고 대표단 규모도 4~5명으로 줄임으로써 ‘실무형’ 방북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짐. 또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소지할 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짐.
 - 한 소식통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목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서를 갖고 갈 지 여부는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방문을 마친 뒤 서울에 들러 북·미대화 결과를 설명하고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의를 거친 후에 방북 결정을 내렸으며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 방문이 끝난 후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의 수도를 계속 방문해 방북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모스크바(러시아)도 포함된다”고 말함.

○ “美 골드버그 교체돼도 대북제재 불변”<RFA>(11/19)

-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해 온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이 예정대로 교체돼도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RFA보도에 따르면 이 국무부의 관리는 “골드버그 조정관이 국무부의 정보조사 차관보에 지명됐지만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대북 제재 조정관의 역할을 계속한다”며 “그의 후임자도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이 관리는 또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골드버그 조정관이 교체되는 것과 관련, “(골드버그가)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맡을 뿐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미 백악관은 지난달 23일 골드버그에 대한 차관보 지명을 상원에 통보했으며, 골드버그 지명자는 19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참석함.



● 美대북인권특사 인준안 상원외교위 통과(11/19)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미 상원 외교 위원회를 17일(현지시간) 통과함. 이에 따라 킹 특사 후보자는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되는대로 공식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킹 특사 후보자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전임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와는 달리 경우 상근직 대사급으로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게 됨.
-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그는 “킹 특사는 인준절차가 끝나는대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오바마, 대북 식량지원은 안할 것”<WP>(11/1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함. 이 신문은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중인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비록 북한의 식량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함.
- 이 당국자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인센티브) 패키지에 들어있지 않으며, (북한의 핵포기는) 6자회담의 의무사항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혀 그간 이뤄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조건없이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해왔던 관행을 중단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이 신문은 지적함.
- WP는 그러나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적어도 13차례에 걸쳐 북한에 식량을 주고 대화를 얻어냈다”면서 “미국의 이런 습관은 여전히 깨기 힘든 것이기는 하다”고 밝힘.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지난 3월 북한의 거부로 중단됐으며, 이후 북한에 닥칠 식량난을 우려한 국제구호단체의 식량지원 재개 호소가 있었으나 냉각된 북·미관계로 인해 현실화되지는 못함.

● “北, 2002년 美와 북핵 정상회담 희망”(11/18)

- 데이비드 스트로브(55)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 부소장은 18일 “북한은 2002년 10월 미국과 ‘평양 핵담판’에서 정상회담 희망 의사를 보였지만 관계 경색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부시 행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라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함.
- 조지 W. 부시 행정부(1기)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8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에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졌더라면 김대중 대통령도 계셨고 당시만해도 북한의 농축 시설의 완공 수준도 현재에 비해 크게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핵문제 해결이나 이에 상응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함.

-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2002년 10월 3~5일, 제임스 켈리 차관보와 잭 프리처드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미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그는 16~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켈리 차관보와 ‘핵담판’에서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암시하는 ‘폭탄 선언’과 함께 ‘최고 지도자급 회담’(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발언에 깜짝 놀랐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는 북측의 정상회담 제의를 의외로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당시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악의 축’ 발언 등으로 양국관계가 크게 경색돼 정상회담은 꿈도 꾸지 못할 때인데도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저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를까’라는 생각에 모두 가우뿔했다”고 설명한 뒤 “워싱턴 귀환 후 정부 내 어느 누구도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들어 본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음.
-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떠낸 ‘전환적 사건’ 제목의 책에도 강석주 제1부상이 켈리 차관보에게 “핵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서 최고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다. 북조선과 미국의 최고 지도부가 만나면 단숨에 해결될 수 있다”며 정상회담을 간접 제의했다고 소개돼 있음.
-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측의 ‘정상회담’ 제기 배경에 대해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한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미군 철수 유도, 아니면 미군이 남아 있더라도 주둔 효과를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과 전략적 관계를 맺자고 수차례 제의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는 “1992년 김영남 외교부장이나 김용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등 고관들은 아널드 캔터 국무차관 등 미 관리들에게 종종 ‘북한은 미국과 전략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 이익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힘.
- 그는 “북한 관리들은 당시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하고 빨리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동북아에 또 다른 동맹을 갖는 게 좋은 식으로 말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했다”고 덧붙였음.
- 한편 스트로브 부소장은 16일 인터뷰에서 “12월 초로 예상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함. 그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고위급 회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위급 대화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보즈워스 대표가 특별한 제안 없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푸켓에서 행한 발언 맥락의 ‘짧은 메



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음.

-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7월 푸켓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경제지원을 대가로 핵을 폐기하는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 “美봉사단체, 北에 집짓기 지원”<RFA>(11/18)

- 미국의 봉사단체인 풀러센터가 평양 순안 구역 오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 집짓기 공사를 시작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함. 이 센터의 데이비드 스넬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 11일 첫 번째 공사 지역인 순안 구역 오산리에서 북한 정부 대표와 함께 농촌 살림집 50가구 착공식을 가졌다”며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집을 지을 자원봉사자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힘.
-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해 온 풀러센터는 착공에 앞서 1년 반 동안 북측과 협상을 벌였으며, 오산리는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로 가옥 3만 채가 무너진 곳으로 알려짐.
- 스넬 대표는 “오산리 주택의 기본 설계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이 맡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설된다”며 “앞으로 북한의 200여 지역으로 집짓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함.
- 또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최소한의 연료로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태양열이나 풍력발전기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것으로 전해짐. 스넬 대표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원자도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며 “특히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북한에 가서 동포를 위해 함께 집 짓는 작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해 한국인의 참여도 검토 중임을 시사함.
- 그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백두산건축연구원 직원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집짓기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뒤 북한 인력의 미국 초청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빅터 차 “보즈워스 방북, 中 대북압박 유도용”(11/18)

-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7일 미국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내기로 한 것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전담 연구프로그램 책임자(코리아 체어)로 있는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함.
-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으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를 지낸 그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정 배경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아시아팀은 순진



하지 않다”고 강조함.

- 그는 “오바마 팀은 고위급 특사의 북한 파견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제하는 실질적인 (대북) 지렛대를 사용하도록 중국에 압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아마도 간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그는 “미국이 중국의 주장대로 특사를 북한에 보내고, 북한이 (북·미 대화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 때는 (대북) 지렛대를 사용하도록 중국에 부담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함. 차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조율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보즈워스 대표를 북한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함.
- 이와 함께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최근의 미 대통령 한국 방문 중 처음으로 가장 편안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와 관련, 미국은 거의 모든 문제들에서 밀접한 입장을 보였던 일본을 가장 편안한 방문지로 활용해 왔지만, 일본의 새 정부 출범, 중국과는 과도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 밖에 그는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가져올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지만 실망할 것 같다고 말함.

● <北美 대화서 미국이 할 것과 말아야 할 것>(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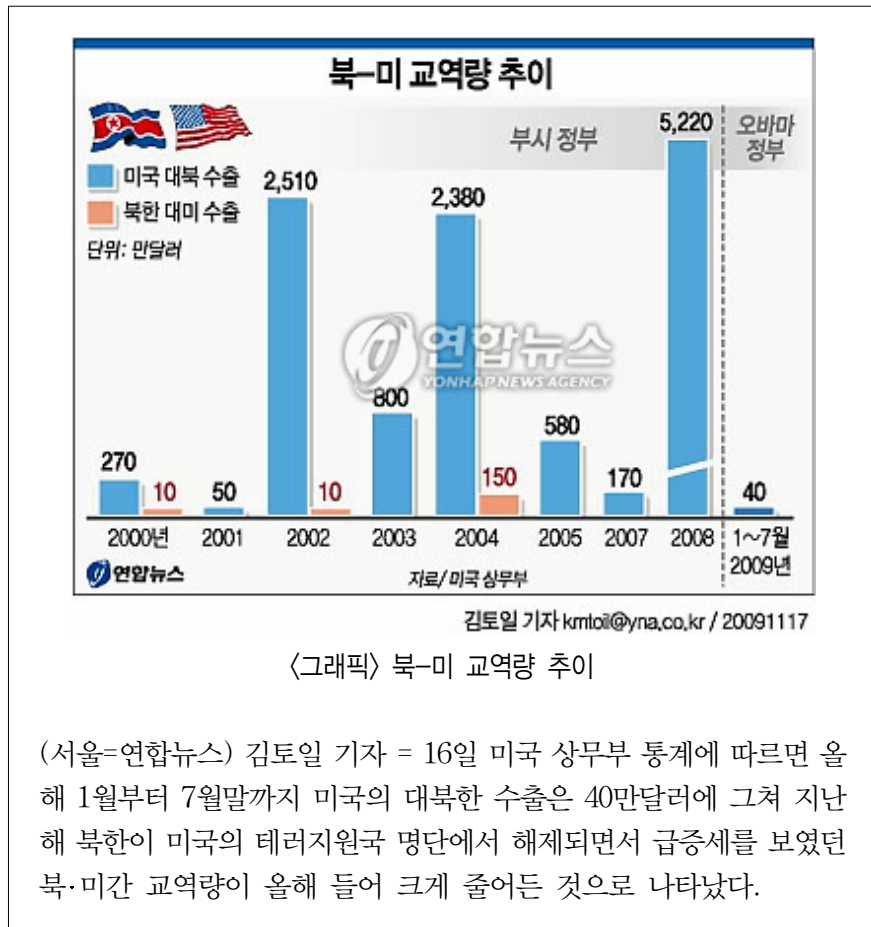
- 북한과 미국간 대화가 내달 초 평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미국이 중·단기적으로 대화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리스트를 작성, 보고서를 통해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음.
- 제임스 쇼프 미국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 부소장은 17일 ‘북한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한 평화체제 개념을 주창하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해제 시사’ 등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6가지를 제시함.
-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미사일에 관한 국제통제체제를 따르기 이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는데 힘을 실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모니터링이 보장되지 않는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 또는 정부보조금이 제공되는 북한과의 교역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NPT 복귀, 한국주도의 한반도평화체제 추진 및 북·일 수교가 이뤄지기 전에 미·북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이 가능한 것처럼 암시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음.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행한 약속에서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북한의 핵확산 네트워크, 기타 불법적인 거래, 위폐제작, 돈세탁 등을 눈감아주거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옹호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는 반대로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6자회담과 직결되지 않는 조치 ▲6자회담 내에서 진전을 필요로 하는 조치 ▲북한의 NPT 복귀 및 남북·북일 화해를 전제로 하는 조치 등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
- 먼저 6자회담과 반드시 연계되지는 않지만,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협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비롯해 학계, 문화계, 관계에 걸친 양자간 교환방문 확대, 국제금융기관에 북한의 옵서버 참여 지지, 유엔 제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합법적인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힘.
- 이어 보고서는 6자회담 내에서 진전을 이뤄내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정부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네거티브 방식의 북한 체제 안전보장(북한을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내용) 재다짐, 3자 혹은 4자방식의 평화체제 협상 지지, 대북 에너지 지원프로그램 재개 지지, 북·미 평화협정 협상 개시, 제한적인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 등을 꼽았음.
- 보고서는 이들 두 번째 조치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는 1단계,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NPT 복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증이 이뤄지는 2단계에 걸쳐 선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함.
- 끝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NPT 복귀가 이뤄진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주도의 한반도평화체제와 더불어 북·미 평화조약 체결 및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평화적 목적의 북한 핵원자로 건설을 위한 핵심부품을 인도하는 것을 지지하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도 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북·미 교역량 올해 들어 급감(11/16)



- 지난해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면서 급증세를 보였던 북·미간 교역량이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6일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미국의 대북한 수출은 40만달러에 그쳤으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전혀 없었음.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 20만달러의 수출이 있었으나 4월과 7월에는 이마저도 각각 10만달러씩으로 줄어들었음. 이는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 5천22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던 것과 비교할 때 사실상 양국간 교역이 중단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실적임.
- 작년에도 미국의 대북한 수입실적은 없었으나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한 6월에만 1천660만달러를 수출한 것을 비롯해 7월 710만달러, 8월 1천70만달러, 10월 74만달러, 12월 1천30만달러 등 거의 매달 상당한 수출실적을 기록함. 작년 미국의 수출품은 곡물류가 4천300만달러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나머지는 기름을 얻을 수 있는 피마자 등의 씨앗, 식물성 지방, 맥아(麥芽), 녹말 등 농산물이 대부분이었음.
- 반면 올해 미국의 대북수출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제2차 핵실험 등을 통해 미국과의 긴장수위를 높이면



서 양국 관계가 냉각되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미국의 대북수출은 1억2천20만달러였으며, 수입은 170만달러였음.

- 북·미 양국간 교역이 없었던 2006년을 제외한 연도별 미국의 대북 수출규모는 ▲2008년 5천220만달러 ▲2007년 170만달러 ▲2005년 580만달러 ▲2004년 2천380만달러 ▲2003년 800만달러 ▲2002년 2천510만달러 ▲2001년 50만달러 ▲2000년 270만달러였음. 이 기간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한 경우는 3차례 있었는데 ▲2004년 150만달러 ▲2002년 10만달러 ▲2000년 10만달러였음.

다. 중·북 관계

● 中 량광례 국방부장 방북(11/22)

-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보도했음. 량 부장은 비행장에서 도착연설문을 발표했으며, 환영 의식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진행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 환영 의식에는 중국 측에서 량 부장 일행과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 측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심상대 북한군 상장 등이 참석했음. 이어 량 부장은 북한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음. 중국 관영 국제방송도 이날 량광례 부장이 5일간의 북한 방문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 량 부장은 비행장에서 발표한 서면연설에서 “이번 방문은 양국 전통 친선을 한층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양국 무장역량 간의 친선 내왕을 밀접히 하고 양국 인민과 군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밝혔음.
- 그는 “중국 측은 조선(북) 측과 함께 양국의 더 아름다운 내일, 그리고 지역(동북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이에 앞서 황쉐핑(黃雪平)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량광례 부장이 오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북한과 일본, 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장의 북한 방문은 2006년 4월 차오강촨(曹剛川) 당시 국방부장 이후 3년 7개월 만임.

● 中 “보즈워스 방북 지지·환영”(11/19)

- 중국은 다음달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북·미대화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조만간 북한을 방문하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친 대변인은 “중국은 이러한 북·미 양자대화가 북핵 6자회담의 조속



라. 러·북 관계

● “러시아 상원 의장, 23일 북한 방문”(11/21)

- 미로노프 의장은 방북에 앞서 “북한 지도부가 나를 초청한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를 만족스럽게 생각해 접수(수용)했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그는 “(북러) 양국 사이의 접촉을 강화하고 쌍방관계의 포괄적인 문제와 세계안전문제에 대한 회담진행이 필요하다”며 “북러관계 발전에서 의회간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작년 11월 러시아를 방문했던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미로보프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 초청의사를 전달했었다. 미로노프 의장은 2004년에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박봉주 당시 내각 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을 만나 양국간 친선증진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었다.

마. 기타

● “北주민, 김정은 집권시 생활고 악화 우려”<RFA>(11/22)

-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정은이 집권하면 김 위원장보다 더 심한 폭정을 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었다.
- 22일 RFA보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북한 주민은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3남인 김정은이 낙점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김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북한 군부에서 김정은을 지지하는 인사가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인사이드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은 김 위원장보다 더 과격한 독재자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민 사이에는 김정은이 집권하면 지금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2006년 3대 권력 세습은 세계적인 망신이라며 후계자 관련 논의를 금지했지만 지난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후 본격적으로 후계자 지명에 나섰다”며 “그가 후계자를 고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권력 이양 이후 어머니가 다른 자신의 여러 자식이 위협에 처하게 될지 여부”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외국지도부 연구담당국장은 “김정은이 독재적이고 괴팍한 성격을 가졌다는 소문이 북한에서 도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아버지에게 이어 집권한다 하더라도 군과 당 내의 경험많은 고위 관리의 의견에 맞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김정은은 김 위원장과 비교해



권력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RFA는 전했다.

● 北, IMO 총회 참가(11/21)

- 북한이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 참가함. 중앙통신은 21일 “영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26차 회의에 참가할 고능두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해사감독국 대표단이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함.
- 북한은 1986년 IMO에 가입했으며 본부가 있는 영국 주재 대사관이 대표부 역할을 맡고 있음. 북한은 지난 3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 1호’의 발사계획과 동해쪽 궤도 좌표를 IMO에 사전통보하면서 영국주재 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평양에서 IMO본부에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함.

● “伊IT업체, 北과 프로그램 공동개발”<RFA>(11/21)

- 이탈리아의 정보기술(IT)업체들이 북한과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함. 이탈리아의 정보기술 업체인 ‘엘레룸’사의 리오네티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지’(Sinji)사와 공동으로 개발해 출시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곳곳에 유통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원격 강의, 온라인 교육의 확대를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높은 수준의 관련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 회사와 꾸준히 접촉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함. 북한은 이미 지난달 ‘엘레룸’과 함께 컴퓨터에서 강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접속, 교수의 강의를 직접 시청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함.
- RFA는 “이탈리아의 또 다른 정보기술업체인 ‘쿠오타제로’도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KCC)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북한 기술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북한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 北외무성, 유엔 대북인권결의 “전면 배격”(11/20)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말함.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이 해마다 벌이고 있는 판에 박힌 정치적 모략책동”이라며 이같이 밝힘.
- 그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내정간섭을 일삼으면



서 우리 인민 자신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감히 어찌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조작해낸 결의”로 평가하면서 “미국이 직접 나서서 EU, 일본 등을 동원해 온갖 허위와 날조로 우리 제도를 모독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날강도적 문서를 또다시 조작해낸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는 특히 “오는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편적 인권상황 정기심의회가 진행되고 빨려불가담(비동맹) 나라들을 비롯한 대다수 유엔 성원국들이 개별나라 관련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통과시켰다는 데 적대행위의 불법 무도성이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대변인은 “인권은 국권이요 국권은 민족의 생명”이라며 “국가 자주권의 담보를 떠난 진정한 인권 향유와 보호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의 국제관계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라고 강조함.
- 이어 “유엔헌장은 민족자결권과 선택권,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자기 식의 사회정치제도를 다른 나라에 강요할 권리가 없을뿐더러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함. 대변인은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일제의 식민통치시기 등을 거론, “남보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자기 손부터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선 미국과 일본을 비난함.
-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은 지난 19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음.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채택(11/20)

-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음. 이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됨.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짐.
- 이날 회의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정치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발언이 이어지는 등 40여 분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함.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측은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



- 제에 관한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
-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이번 결의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 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감.
 - 이날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는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임.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5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됨.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함. 한국대표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음.

● “북한은 편집증적 문화적 특성 보유”(11/18)

-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메릴리 베어드는 17일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 사회는 편집증적인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마니교도적 사고체계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함. 베어드는 이날 조지아공대(조지아텍)의 ‘샘 년 국제학 대학 및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센터(CISTP)’가 주최한 북한문제 특강에서 ‘편집증적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함.
- 베어드는 “북한체제는 마니교적인 세계관위에 공포와 민족주의를 가미시켰으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아도취적인 성향까지 결합돼 있다”면서 “이런 특성을 토대로 북한 정권은 자신은 ‘선한 희생자’ 그리고 미국등에 대해서는 ‘사악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위협과 대립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통치하고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분석함. 그는 이어 김정일과 같은 자아도취적 성향의 지도자는 스스로를 상당히 원칙주의자라고 믿겠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자기 입장과 약속을 바꿀 수 있는 스타일이라면서 지난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했던 북한이 서방의 대북경수로 지원이 늦어지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단적인 예라고 주장함.
- 그는 또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대청해전’과 관련,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서해상에서 긴장을 조성해 핵협상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함정이 일부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제유지를 위한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베어드는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한국·일본담당 전문가,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한일담당관 및 국가정보협의회(NIC)의 핵확산문제 전문가 등으로 27년간 근무하며, 북한의 지도체제와 핵무기 관리체계에 대해 연구 해온 여성 전문가.

- 현재는 애틀랜타에서 독자적으로 북한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그녀는 지난 2003년 미 공군대학에서 발간된 ‘적국(Thy Enemy)’이란 책에서 북한 파트의 저술을 담당했고, 현재는 ‘북한 투쟁자들(North Korea Agonistes)’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중임.

● 러시아, 대북 식량지원 완료(11/17)

-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완료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통신은 “이번에 러시아 연방 정부가 조선(북)에 식량을 기증한 것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표시로 된다”며 이 같이 전함. 통신은 그러나 러시아가 지원한 식량의 종류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음.
- 앞서 중앙통신은 지난 9월25일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함경북도 라진항에 도착, 현지에서 기증식이 열렸다고 소개함. 같은 달 28일에는 베트남 정부가 지원한 쌀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역시 지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음.

● “北, DMZ에 작전물자 저장병커 800개” <RFA>(11/17)

-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남침시 사용할 작전물자를 저장하는 병커 800개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북한군에서 상좌(한국군의 중령과 대령 중간)로 있다가 탈북해 한국 군정보기관의 대북정보 수집활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한 탈북자는 17일 자유아시아 방송(RFA)과 인터뷰에서 “1천500명에서 2천명 가량의 인원이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작전 물자가 병커마다 들어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그는 또 “유사시 북한의 게릴라 부대원들이 32kg의 전투배낭을 메고 완전 무장해 DMZ까지 올 경우 체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병커를 짓고 남침용 작전물자를 보관한 것”이라며 “발사관탄, 60mm 박격포탄, 압축폭약, 각종 탄알 외에도 국군의 군복과 명찰을 준비해 남침시 북측 게릴라 부대를 한국군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함.
- 그는 “(이런 병커가) 2007년까지 800여 개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70%는 남측을 교란하기 위해 가짜로 만든 것”이라며 “병커는 반지하 상태지만 남침용 땅굴과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탈북자는 18일 미 의회에서 북한의 남침 준비상황 등에 대해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이라고 RFA는 소개함.



● “北특권층, 불법활동으로 호화생활” <VOA>(11/17)

- 미국 국무부에서 선임 경제자문관을 지낸 윌리엄 뉴콤씨가 미 캘리포니아 소재 노틸러스 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성자금’ 명목의 외화를 바치고 호화생활을 하는 특권층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전함. 북한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마약 밀매와 위조지폐, 무기 거래, 돈 세탁 등 불법활동 규모가 커지고 횡수가 빈번해지면서 미국은 이를 국가 차원의 범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이 방송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밝힘.
- 북한은 또 최근 들어 마약과 위조지폐 외에 위조담배를 만드는데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뉴콤 전 경제자문관은 이와 관련, “북한의 군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위조담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 군부와 보위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10개에서 12개의 공장을 비밀리에 가동하며 위조담배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함.
-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위조지폐나 마약에 비해 담배 위조를 적발하는 데 관심을 덜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조담배에 주력하는 것 같다”고 지적함. 불법행위를 벌이는 당 간부와 해외 근무 외교관, 외화벌이 일꾼 등은 마약 밀매 등으로 조성된 미국 달러를 ‘충성자금’ 명목으로 노동당 39호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바치는 것으로 알려짐.
- VOA는 “돈을 바친 사람들에게 (김 위원장은) 승진과 보직 등의 혜택을 준다”며 “불법 활동을 통해 달러를 손에 쥐는 당 간부들은 외국산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외국을 드나들며 각종 사치품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소개함. 북한의 대외보협총국에서 일하다 탈북한 김광진씨는 “충성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벌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액수에 따라 평가해 준다”며 “영웅 칭호도 주고, 그에 따른 각종 특권도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성자금을 마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 반응>(11/20)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점 논의된 북한 핵문제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해 낙관도 비관도 아닌 신중한 전망과 분석을 내놓았음. 이들은 내달 8일로 결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서는 대체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대반 우려반’의 입장을 보였음.

- ◇북핵 해법 및 북·미대화 문제 =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의 전망과 관련,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의무사항을 미국과 북한이 이행하겠다는데 동의한다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선택의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본다”고 분석함. 리비어 회장은 “북한의 핵문제는 경제 및 외교관계 정상화, 체제 안전보장, 정전협정의 대체 등과 연결된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포괄적 접근 방식은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접근방식의 핵심”이라고 평가함.
- 북한문제에 정통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여러번 북한과 상대한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정과 틀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서도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내딛는 긍정적인일보(一步)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리처드슨 주지사는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하는 것은 아마도 북한이 궁극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사전양해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북핵 일괄타결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하게 점침.
-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시아정책센터 소장은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핵 일괄타결안인 ‘그랜드 바겐’에 의견일치를 본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에 관해 확고하고도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함. 부시 소장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전망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그간 북·미 양자회담에서 미국의 적대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만일 북한이 그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6자회담의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음.
- 부시 소장은 다만 “보즈워스 대표가 평양에 직접 가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북한의 생각이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유용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양보를 한다면 그 기회를 반드시 포착할 것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북한이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내달 북·미 대화에서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임.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면서 북한 핵을 관리하는 쪽에 무게를 싣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중·단기적인 북핵 해결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음.
- ◇한·미 FTA 전망 = 리비어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행한 발언과 특히 ‘한·미FTA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한·미FTA의 전망에 낙관적인 입장을 갖게 한다”고 평가함. 리비어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의 조기 비준동의를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부시 소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문제와 관련해 일단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는 출범 이후 무역정책을 세우는데 더딘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무역 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함.
- 공화당원이면서도 지난해 미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 캠프 쪽에서 외교자문을 했던 플레이크 소장은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무역정책 때문에 민주당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지연은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음.

● 한·미, 그랜드바겐 공감..車추가논의 시사(11/19)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내달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 북·미대화에 나서기로 함.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핵 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됨.
-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데 대해 이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이 FTA에 걸림돌이 된다면 추가 협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협상 타결 이후 양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FTA도 극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0분간 이 대통령과 단독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밝힘. 보즈워스 대표의 대통령 특사 자격 방북은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담판을 벌인 이후 7년 만에 처음임.
-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도 “양국 공동 접근방식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해 그랜드바겐 공동추진 의사를 명확히 함.

- 두 정상은 이와 함께 6.25 전쟁 발발 60년인 내년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에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라며 자동차 산업 등 일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동차가 미국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혀 ‘추가논의’의 여지를 남겼음. 이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단독회담의 상당부분을 FTA 문제에 대해 대화를 했다”면서 “두 정상이 반드시 성사시키자는데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다”고 전함.
- 김 본부장은 자동차 분야 추가협약의 가능성과 관련, “오늘로 봐서는 추가협의를 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의 경우 대표적으로 농업, 미국은 자동차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한 것”이라고 설명함. 청와대 관계자는 “협정 문안까지 고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측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음.
-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미국 의회의 벽 앞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추가논의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됨.

● <한·미정상회담> 글로벌 이슈(11/19)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함. 우선 한·미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 균형잡힌 지속성장을 위해 유용한 틀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미국 정부는 1차와 3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젠더 설정, 회의 운영 등 준비 과정의 경험과 비결을 한국에 전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
-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는 G20를 통해 세계경제를 구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은 내년에 G20를 주



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함. 양국 정상은 또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 워크’가 잘 이행되도록 공조를 계속하기로 함.

-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청정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 ▲대테러 등의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함. 특히 양국 정상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보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재건 인력(PRT)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PRT를 보내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함. 또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를 개도국 최대치(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로 설정한 점을 언급, “한국이 발표한 2020년의 야심찬 목표는 신흥 경제국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음.
- 이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핵 비확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 4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겠다고 밝힘. 이밖에 양국 정상은 다음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 APEC와 베이징에서의 진전을 기반으로 코펜하겐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김의장-후진타오 “6자 통해 비핵화달성해야”(11/20)

-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2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함. 또 김 의장과 후 주석은 북핵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음.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공감함.
- 후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 김 의장에게 환영의 뜻과 함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이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함. 이에 김 의장은 “바쁜 시간을 내어 대표단을 맞아 준 후 주석에게 감사하다”고 밝히고 중국의 건국 60주년을 축하함.
- 김 의장은 또 “수교 17년 이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한·중 관계가 세계에서의 양국 관계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회 차원에



- 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후 주석도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진일보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과 아시아 평화에 매우 유리한 일”이라면서 “중국은 양국간 우호 범위를 확대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후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한국 국회 사이에 정기적 교류시스템을 수립한 것을 높이 평가한 뒤 “양국 국회간 교류 협력을 적극 지지하며 더 많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방중해 교류를 촉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함.
 - 양국 지도자들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의지도 공통적으로 피력함. 후 주석은 “중국은 한결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 왔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각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함. 후 주석은 이어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이는 한반도 정세를 잘 활용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회담이 제 궤도에 오르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국 측과 대화와 소통을 긴밀히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 김 의장도 “한반도에는 결코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중국이 그동안 노력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 뒤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반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중국 측에 당부함. 김 의장은 “양국관계가 긴밀하다보니 사소한 오해나 실수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는 지도자 및 관계기관 간에 잘 협력하고 논의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 자리에는 김 의장을 수행한 한나라당 이병석, 구상찬, 정미경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최거훈 의장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및 신정승 주중 대사 등이 참석함. 중국 측에서는 난전중(南振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 부주임, 차오웨이저우(曹衛洲) 중한우호소조 회장 등 11명이 배석함.
 - 김 의장은 앞서 18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권력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 의회 정상 회담’을 가진 뒤 우 위원장이 주최한 공식 환영만찬에 참석함.

다. 한·러 관계

● 한·러외교 “북핵, 포괄방안 강구해야”(11/16)

-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를 다뤄나감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국



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두 장관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지속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기로 함. 아울러 올해 양국간 활발한 고위인 사교류와 극동지역 물류단지 건설·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래 구축된 한·러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함.

라. 미·중 관계

● 오바마 “中, 위안화 시스템 개혁해야”(11/18)

-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원자 바오(溫家寶) 총리와 만나 무역마찰 문제 등을 협의함. 그는 국무장관과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대동하고 회담장에 입장,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력히 요청함.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달 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난 원 총리를 상대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원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미국은 모두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면서 “화해하면 이익이 있고 다투면 다친다(和則兩利, 斗則俱傷)”고 뼈있는 발언을 내놨음. 그는 이어 “중국은 중미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양국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중국과 미국은 수교 30년을 맞아 무역거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양국과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함.
-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 노력을 지지하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도 유리하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중요한 무역 동반자로, 보호 무역주의는 양측 모두에 불리한 것으로 무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특히 “중국은 경제 구조조정에 나서고 내수를 확대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함.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함. 그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함. 후 주석도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한반도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정상회담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쑤진청(紫禁城)을 관광하고 중국 권력서열 2위인 우방귀(吳邦



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남.

● <미·중 ‘G2’로 경쟁속 협력 다짐>(11/1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후 첫 방중은 지난 30여년에 걸쳐 심한 변화를 겪었던 국제 정치의 현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2박3일간의 방중을 마치고 18일 서울로 떠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고 세계의 일원으로 나온 지 30여년 만에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G2의 한 축으로 성장했음을 시인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언한 것임.
-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 회담에서 위안화환율과 무역마찰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합의 없이 이견을 남겨두면서도 양국 문제에 전략적이며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글로벌 문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게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임.
-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 중국에 친선과 화해의 손길을 보내며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보수층은 ‘저자세 외교’라며 불만을 표시했고 유럽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중시하고 유럽을 무시했다는 여론이 일었음. 반면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줌으로써 체면을 세워줬다며 만족한 표정이며 오바마 대통령을 유례없이 극진하게 대접, 세계 최강국 미국에 대한 예의를 깎듯이 갖췄음.
- ◇ 미·중 공동성명 내용 =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핵 및 이란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 핵비확산 시스템 유지 ▲ 기후변화 협약 회의의 성공에 공동 노력에 합의함. 양국 정상은 또 중국은 인권과 종교 등의 문제에 대해 평등과 상호존중, 내정 불간섭의 정신 아래 대화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함.
- 공동성명은 우주과학 분야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기로 하고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 통제와 보건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강화하고 줄기세포 연구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양국은 또 군사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세계경기 회복을 위해 양측의 경제를 구조조정하고 통화정책을 조정하기로 했으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음.
- 샹오렌(肖煉) 사회과학원 미국경제연구센터 주임은 18일자 중국경제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의 방중은 대체로 양국 공동이익의 심화와 에너지분야, 기후변화 등에 관한 공동 협력, 국제문제에 대응한 협력 강화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그는 “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역불균형과 마찰 문제는 실제로는 큰 틀에서 별로 문제가 되



- 지 않는다”고 말함.
- ◇**미국·유럽 반응** =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중 메시지에는 “중국이 미국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면 (미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를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빠져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7일 보도함. 포스트는 17일 ‘중국 환영?, 오바마 대통령의 비민주적 권력과 동반자관계 시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각 있는 자세로 보기 힘들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함.
 - 반면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이 글로벌 파워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힘을 인정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유럽은 불만이었음.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제마이네 차이퉁은 “오바마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미·중이 G2 콘도미니엄을 마련했다는 기쁨에 들떠 유럽은 안중에 없다”고 꼬집었고 데니스 맥쉐인 전 영국 유럽장관은 “유럽인들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 관심이 없는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함.
 - ◇**중국 입장** =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가 중국 영토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주고 중국을 대등한 관계로 인정해준데 대해 만족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기쁨의 표정은 자제하고 있음. 오히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그만큼 깊어져야 할 부담도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로 신중과 조심스러움을 대신함.
 -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오바마 정부와 안정적인 발전 관계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기대가 너무 커 중국에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울 경우에는 양국 관계가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함.
 -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극진하게 대접함. 베이징 방문 첫날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권력 서열 6위의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공항에서 파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영접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16일과 17일 잇따라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만찬을 베풀었음. 중국 대학생들은 상하이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에 열광했고 중국 전역에 오바마 붐이 일어났음.
 - ◇**갈등 불씨는 여전** = 미·중 공동성명을 보면 분야별로 양국 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남.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 등 분야에서 시장에 기초한 경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지만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 다만 중국 정부는 이날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부장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중·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위안화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고 인정



하면서도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맞섰음.

- 양국 정상은 에너지의 최대 소비국이자 생산국으로서 양국의 협력이 없이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지만 후 주석은 “공동의 책임이지만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원칙 아래에서 기후변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음.
- 북핵 문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6자회담 재개 등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다소 달랐음.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음. 이란 핵문제에 대한 미·중 양국 태도도 마찬가지로 엇갈렸음.
-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도 “티베트는 중국 영토의 일부”이라고 중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곧바로 중국이 금기로 여기는 달라이 라마 대표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라고 중국을 압박해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였음.

● “오바마 첫 訪中 민주주의 메시지 빠져” <WP> (11/1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메시지에 “중국이 미국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면 (미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를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빠져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함. 포스트는 17일 ‘중국 환영?, 오바마 대통령의 비민주적 권력과 동반자관계 시도’라는 제목의 사실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각 있는 자세로 보기 힘들다”고 밝힘.
- 포스트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환영한다는 표현이 정말 적합한 표현인가”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슈퍼파워에 대한 표현은 결국 ‘민주주의’를 담지 못했다”고 꼬집었음.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국 메시지가 단순한 현실주의를 담고 있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근본적인 차이마저 협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것임.
- 또 미국은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대중국 억제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사려 깊은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인 셈임. 포스트는 또 “중국과의 실용적인 협력 추구는 필요하고 올바른 일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종교, 소수 인권을 지속적으로, 때로는 무자비하게 억압해온 중국 정부와의 협력이 결코 다른 비민주적인 정권과 맞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포스트는 중국이 과거 10년간 보여준 민주국가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비민주적인 형태로 짐바브웨와 수단, 독재정권 지원,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의 무자비한 천연자원 확보, 이란과의 교역 확대 등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함.



마. 미·일 관계

● “日 외무성에 핵 밀약 증거 문서”(11/21)

-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묵인하는 내용의 미·일 핵 밀약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일본 외무성 내에서 발견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전함. 양국 간 핵 밀약은 1960년 양국 안보조약 개정 시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핵무기 탑재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것임.
-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이런 밀약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 왔으나, 이번 관련 문서 발견으로 종전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신문은 지적함. 발견된 문서는 1960년 1월의 미·일 안보조약 개정 직전의 핵무기 반입과 관련한 사전 협의 등의 내용을 논의한 ‘토의기록’을 정리한 것임.
- 이 문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외무성에 대해 특별지침을 만들어 밀약과 관련된 사실 여부 조사를 지시한 이후 찾아냄. 오카다 외상은 내주 중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문서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설 계획임.
- 그동안 미국 측에서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양국 간 논의 내용을 “미군 항공기의 일본 영공 통과나 미 해군 함정의 일본 영해, 항만 진입에 관해 현행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음. 현행 절차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임.
- 미·일 안보조약 전문가인 오사카(大阪)대 사카모토 가즈야(坂元一哉) 교수는 “이번 발견으로 (밀약의 존재를 보여주는) 미국 측의 외교 문서에 일본 측의 문서를 대조해 역사의 진실을 분명히 밝힐 수 있게 됐다”며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면 미·일 동맹과 비핵 3원칙 등의 쟁점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함.

● “미·일, 후텐마 조기해결 견해일치”(11/18)

-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함. 미국과 일본은 17일 일본 측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미국 측에서는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와 윌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첫 실무작업팀 회의를 열었음.
- 회의가 끝난뒤 기타자와 방위상은 “외상(오카다 가쓰야)과 나의 인식은 연내에 어느 정도 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해 미국과 일본이 조기결론에 공감했음을 시사함.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미국의 장관급 실무팀이 협의해 결론을 낼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실무협상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 이날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2006년 두 나라가 합의한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名護)시 이전안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 측은 기존 합의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바. 미·러 관계

● “미·러, 아프간 경제재건 협력할 것”(11/18)

- 러시아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현지시간) 외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한 리처드 홀브룩 미국 아프간·파키스탄 특사와 러시아 당국자 간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함.
- 그는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공조 노력 및 대선 이후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아프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미국과 러시아는 아프간 정부의 경제 재건 노력을 돕고 정부군과 경찰의 안보 및 치안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함. 홀브룩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간 미군 증파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아프간 주둔 나토군에 대한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한 러시아 영공 통과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 중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과 관련,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의회 비준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양국은 의회 비준이 있기 전이라도 새 조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함.
- 앞서 양국 정상은 15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별도로 양자 회동을 하고 START-1을 대신할 새 조약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사. 중·일 관계

● 中 양제츠, 19일 訪日(11/17)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의 초청으로 오는 19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17일 발표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제츠 부장이 오는 22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중·일 관계 강화 방안과 공동관심사를 논의한다고 밝힘.
- 친강 대변인은 그러나 양 부장의 방일이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



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음. 친 대변인은 중·일 관계는 일본 새 정권의 출범이후 각계 인사의 교류를 통해 더욱 긴밀하게 발전, 전략적인 호혜 관계에 대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도달했다고 말함.

- 친 대변인은 양 부장의 방일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한반도문제는 중·일간의 공동관심사라고 말하고 회답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논의될 것이라고 답변함. 중·일 관계에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훈풍이 불고있으며 시진핑 부주석은 오는 12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임.

아. 기타

● 中, 최신형 핵잠수함 개발(11/20)

- 중국이 3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최신형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함.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20일 중국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신형 잠수함이 일련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함. 정주만보(鄭州晚報)는 이를 두고 “이번에 개발된 최신형 잠수함이 전면적인 작전능력을 보유한 핵잠수함”이라고 전함.
- 이 잠수함은 2006년 12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로 개발에 착수된 것으로, 22개 성·시와 7개 조선사, 20개의 설계업체, 500여곳의 제조업체가 함께 심혈을 기울여 생산함. 이 잠수함은 극한의 잠수능력과 수중에서의 고속 운항능력, 심해에서의 레이더 신호 발사 등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최근 실전 훈련과 실험을 통해 성능에 대한 검증을 마침.
- 해방군보는 잠수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군 대표단과 과학자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성능을 제고했다고 전함. 이 잠수함의 기종과 제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최신예 잠수함인 ‘094형(晉級)’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짐.

● 마잉주 “후진타오와 정상회담 배제 않아”(11/19)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마 총통은 18일 밤 방영된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 TV와 가진 단독 회견에서 후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후 주석과 만날 어떠한 계획도 없지만 미래에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
- 그는 국민당 주석의 자격으로 ‘마-후’회담을 하려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우리는 아직 정상회담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말함. 마-후 회담은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통 자격 대신 국민당 마잉주 주석, 중국공산당 후진타오 총서기의 자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마 총통은 또 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 상호 신뢰 구축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어 중국과의 통일 문제와 관련, “양안이 60년간 분단돼 양측 정부와 국민이 서로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의제부터 먼저 협의하고 다른 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마 총통은 중국·대만 양안 간 무역액이 지난해 무려 1천360억달러에 이르러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해야 할 긴박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ECFA에 서명하면 대만과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격상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중국과 대만이 12월 대만 중부 타이중(臺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양안 회담에서 ECFA를 협의해 내년에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이밖에 마 총통은 현재 최악의 경제 상황이 이미 지나가 내년 대만 경제가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함.

● <中 숨돌릴 틈 없었다..외교 중심무대 과시>(11/19)

- 중국이 18일 베이징에서 정상외교와 민간 외교 등으로 숨돌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국제외교의 중심 무대로 부상했음을 과시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간의 회담을 비롯해 남북한과의 회동, 러시아·베트남과의 협상 및 민간 외교를 하루에 동시에 치러낸 것임.
-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떠나기 앞서 원자바오 총리과 가진 회담에서 위안화 시스템 변경을 촉구하고 무역역조 문제를 논의함.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주요 2개국)으로 부상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듯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강조하고 “G2라는 표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함.
- 베이징을 방문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우방귀(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장과 만나 양국 전략적 동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입법부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함. 중국은 또 이날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김종각 국방위원을 면담하고 북·중 군대간 전략적 교류에 대해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 중국과 베트남은 이날 베이징에서 양국 국경선 획정에 관한 3개의 의정서 및 협정서를 체결함.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후수안손 베트남 외교차관은 회담에서 1천300km에 달하는 양국 육지 국경선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국경선도 외교적 협상을 통해 획정하기로 합의함.
- 그런가 하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러 우호·평화·발전위원회 8차 정기 총회에 축전을 보내 이 비정부기구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높이 평가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대회에 보낸 메



시지에서 이 위원회가 양국 인민간 우호적인 교류를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며 양국간 공동 사회 기반을 확대하고 친선과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앞장서왔다고 치하함.



[참고 1] <표> 월간 남북교역 추이(연합뉴스, 11/16)

(단위: 천달러)

	반출금액	반입금액	교역규모
2007년 1월	37,097	55,877	92,974
2월	37,433	44,475	81,908
3월	46,442	58,771	105,213
4월	86,756	46,975	133,731
5월	88,458	63,273	151,731
6월	98,909	57,002	155,911
7월	103,134	78,376	181,510
8월	91,600	59,518	151,118
9월	107,026	64,919	171,945
10월	129,325	82,939	212,264
11월	113,129	82,707	195,836
12월	89,279	71,519	160,798
2008년 1월	68,508	69,790	138,298
2월	58,759	60,199	118,958
3월	78,055	79,200	157,255
4월	74,243	78,162	152,405
5월	95,150	76,699	171,849
6월	81,615	64,410	146,025
7월	98,149	81,781	179,930
8월	83,459	78,511	161,970
9월	67,073	99,790	166,863
10월	63,811	99,200	163,011
11월	62,035	79,898	141,933
12월	52,551	69,734	122,285
2009년 1월	42,816	68,512	111,328
2월	41,640	59,251	100,891
3월	40,889	67,684	108,573
4월	40,325	64,721	105,046
5월	42,252	64,265	106,517
6월	52,138	61,011	113,149
7월	63,891	75,525	139,416
8월	53,819	82,809	136,628
9월	74,475	98,703	173,178
10월	71,943	100,658	172,601

(자료=관세청) (서울=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1/16/0511000000AKR20091116173700002>

HTML



[참고 2] <美 주요 인사 방북 일지>(연합뉴스, 11/19)

- ▲1999년 3월 29~30일 =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장창천 미주부국장과 북-미 제4차 미사일회담
- ▲1999년 5월 20~24일 = 조엘 위트 국무부 부과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 금창리 핵의혹 시설 1차 방문
- ▲1999년 5월 25~28일 =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특사자격으로 클린턴 미 대통령 친서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통해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에게 전달.
- ▲2000년 5월 23~27일 = 조 프리처드 국무부 부과장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 금창리 핵의혹 시설 2차 방문
- ▲2000년 10월 23~25일 =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평양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차례 회담. 한반도 긴장완화, 북·미 외교대표부 개설 등 논의
- ▲2002년 10월 3~5일 =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대통령 특사 자격 방문.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 시인 촉구
- ▲2005년 1월 8~11일 = 톰 랜토스 하원의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만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리비아식 해법 제안
- ▲2007년 4월 8~11일 =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 송환 논의하고 '2.13' 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폐기 필요성 언급
- ▲2007년 6월 21~22일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북
- ▲2008년 5월 8~10일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북한으로부터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받음
- ▲2008년 10월 1~3일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핵검증 원칙 논의
- ▲2009년 8월4~5일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북한 억류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차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후 석방된 여기자들과 함께 귀국
- ▲2009년 10월13~15일 =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자 구호단체 '사마리탄즈 퍼스'의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방북, 박의춘 외무상 등 면담

(sungjin@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1/19/0503000000AKR20091119138400014>.

HTML



[참고 3] <李대통령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11/19)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까지 추웠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따뜻한 날씨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호존중을 통한 협력의 확대를 기치로,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해 온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벌써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여러 다자회의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유익한 대화를 매우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현재 양국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러한 한·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동맹]

우선,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핵우산과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을 내실 있게 이행하여 한·미 동맹을 모범적인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두 정상은 6.25 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내년에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서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북핵·북한 문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 양국간에 북핵문제와 대북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이 Grand Bargain으로 제시한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구체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북한이 이러한 우리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여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울러 북한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FTA]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 FTA가 가지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및 범세계적 문제]

우리 두 정상은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 대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4월 미국이 개최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맺음말]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갖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1/19/0503000000AKR20091119108700001>.
HTML



[참고 4]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전문>(11/19)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김정은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 해결시한을 언제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어느 정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

▲(이 대통령)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했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북한과 협상했지만 일보전진하다 일보 후퇴해서 오늘날까지 아무런 합의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제공조가 완벽하게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겠다는 관점에서 그랜드 바겐을 제안하게 됐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할수록 협상에 유리하다고 본다.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뤄야 하고, 이를 수 있고,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해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북한 스스로 안전과 경제, 북한 인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나는 이 문제를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FTA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할 테니 저는 듣기로 하겠다.

--한·미FTA가 양국 경제협력 확대, 한·미 동맹강화의 핵심적 사안인 만큼 신속한 비준 발효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또 그랜드 바겐에 대한 양국 공조는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는가.

▲(오바마 대통령) 먼저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것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과 저는 우리 모두 과거의 패턴은 중단시키고, 종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취하고 그 다음에 대화에 복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서 떠나서 어떤 양보를 하라는 것이다. 핵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다. 이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은 열려 있다. 북핵 제재 조치 완화, 국제사회 동참의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기 위해선 북한이 진지하게 핵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여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FTA에 대해 말하자면 양국이 무역 관계를 확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과 담당자들에게 협정의 진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겠다고 말했다. 지금 많은 논의와 작업을 하고 있고, 팀을 구성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비준에 가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경쟁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미FTA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양국관계를 강화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다. 이런 무역 불균형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묶어 버리는 관행이다. 미국 의회에서 봐서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인과 미국기업은 각자의 장·단점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윈윈상황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이 핵문제에 관한 제안을 계속 거부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 및 전망은.

▲(오바마 대통령) 저희 행정부 초기에 집행한 정책을 지난 몇 달 동안 만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해서 이란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여러 개를 제안해서 이란 측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방법을 제공했다. 평화로운 핵무기 개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안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공정한 딜을 이란에 제공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듀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대화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선택했다. 우리의 오퍼를 테이블에 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 하에서 이런 프리포즈를 제시했다. 저농축우라늄을 제거하고 이것을 밖에서 처리해서 이란에 다시 가져와서 핵무기개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딜의 공정성은 러시아와 중국,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지혜롭고 창조적인 프리포즈로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났는데 이 프리포즈에 대해 '예스(YES)'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내적 문제 때문이든, 자신의 발언에 묻혀서 '예스'라고 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응답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서 국제파트너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즉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쟁취하지 않는다면 이란이 덜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몇 주 동안 패키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여러 조치가 포함된 패키지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아직도 희망컨대 이란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란다.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국제적 단결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초만 해도 국제사회의 노력이 분산적이었고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그런데 그 때와 비교할 때 우리가 옳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 한·미 FTA를 타결할 의향이 있는가.

▲(이 대통령) 저는 원칙적으로 세계가 자유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년간 세계는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가 균형발전하고, 균형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불균형한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지가 G20에서 논의할 과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무역 역조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통상 균형을 갖춰가고 있다. 10년, 20년 전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에는 무역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균형을 잡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아 나라별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한 뜻으로 받아들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전향적인 말씀을 해줬고 그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에서도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양국간 통상에 도움이 되고 전략적인 측면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국에 공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FTA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서비스업이나 농업하는 분들은 지금도 절대 반대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있다. EU(유럽연합)도 큰 생산국이지만 EU하고도 FTA를 했다. 그분들도 일 년에 한국에 자동차 5만대를 수출한다. 미국하고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해를 해 볼려고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졌고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

(nojae@yna.co.kr, kj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1/19/0503000000AKR20091119115400001.HTML>